

일본의 배합사료가격 급등 축산농가 지원 정책 (22.8.5.)

한우정책연구소

1. 중앙정부 대책 (4월 28일)

<원유가격·물가급등 등 종합긴급대책(농림수산관계) ; 751억 엔>

□ 배합사료 가격급등 긴급대책사업 : 435억 엔(4,248억 원, 100엔 = 976.5원)

- ‘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’의 보전기금(정부 부담금)을 대폭 확충함으로써, 생산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을 보장
- ‘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’는, 사료가격 급등 시 국가 및 사료업체 그리고 농가가 적립한 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
 - 수입곡물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가격차 보전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, 기금잔고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
- ‘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’를 통해, 21년 한 해, 축산농가가 지원받은 금액은 총 1,876억 엔(1조 8,300억 원)/ ※ (22년 1~3월간) 286억 엔
=> 이는, **연간 축산업 생산액의 5.8% 수준** (20년 3조 2,372억 엔(31조 6천억 원)
[※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(23조 5천억원(21년))의, 5.8%는 1조 3,600억 원]

□ 농림어업 금융지원대책

- 대출기간 당초 **5년간 실질무이자** 조치 :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등
- **실질 무담보·무보증인 용자 조치** : 일본정책금융공고
- 농업신용보증보험기반강화사업
→ **채무보증의 실질 무담보·무보증인 인수, 첫 5년간 보증료 면제** 조치
- 농림어업 세이프티네트 자금 → 대출한도액 **특례조치**
(통상) 연간경영비의 6/12, 600만 엔 한도 => (특례) 동 12/12, 1200만 엔으로 확대

2. 지방정부 대책 : 지자체 독자적으로 사료가격 급등 분 일부 재정지원

- 효고현(2,400엔/톤), 오카야마현(4,000엔/톤), 히로시마현(3,200엔/톤),
- 시즈오카현, 미에현(기준가 이상 인상분의 1/2 지원) 등